



김민석 국무총리, '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' 개최

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
- 6.3 지방선거를 앞두고,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(목)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'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'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(일시 및 장소) '26.2.26(목) 09:00~09:40, 정부서울청사

(참석) 국무총리(주재), 과기부·교육부·법무부·행안부·문체부·방미통위·검찰청·경찰청

-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(AI)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상황에서, 6.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□ 김 총리는 “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의 횡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, 이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킨 국민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”며,

- “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,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한편,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,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.

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,
 -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.

-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,
 -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▲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, ▲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련선거, ▲ 금품·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·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.
-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.
 - 특히,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,
 - 3.5일부터 시·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·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.
- 대검찰청은 ‘단계별 특별근무계획(‘26.1월)’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하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,
 - 과학 수사,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국내·외를 불문,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.
-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0.14일부터 「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/F」를 운영하고, 올해 1.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·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‘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’을 하고 있으며,
 -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.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, 허위사실 유포 포함 ‘5대 선거범죄’를 집중단속 중이다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·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,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
-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·중·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, 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,
 -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·중대사안 신고 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.
 -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,
 -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('26.下),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- 김 총리는 “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 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성훈 (044-200-2082)
		담당자	사무관	최송아 (044-200-2083)
<공동>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두원 (044-202-623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희 (044-202-6295)
			사무관	신 환 (044-202-6285)
<공동>	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	책임자	과 장	황현정 (044-203-6612)
		담당자	사무관	홍민표 (044-203-6995)
			교육연구사	양가윤 (044-203-6988)
<공동>	법무부 공공형사과	책임자	과 장	박지훈 (02-2110-3280)
		담당자	검 사	이수영 (02-2110-3280)
<공동>	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	책임자	과 장	이준식 (044-205-3371)
		담당자	사무관	김창균 (044-205-3380)
<공동>	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	책임자	과 장	박희건 (044-205-3551)
		담당자	사무관	권순관 (044-205-3533)
<공동>	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태욱 (044-203-3211)
		담당자	사무관	최원영 (044-203-3223)
<공동>	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	책임자	팀 장	박강욱 (02-2110-16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엽 (02-2110-1641)
<공동>	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	책임자	과 장	최용보 (02-535-0253)
		담당자	검 사	신기창 (02-3480-2742)
<공동>	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	책임자	총 경	박찬우 (02-3150-2037)
		담당자	경 정	유지훈 (02-3150-2763)